

# 동아시아의 꿈: 1894년과 2014년 지역질서 건축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 글은 1894년과 2014년 역사적 시간을 결합하여 미래 동아시아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의 꿈이 대안적 미래의 성격을 가지나 전통적 과거로 회귀하는, 항상적 시간의 시대로 귀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본의 꿈은 120년 전 근대화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한 후, 한국의 대안은 21세기 환경에 부합하는 시간관념 속에서 주변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꿈을 엮어내는 능력에 의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결론짓는다.

미국, 중국, 일본이란 세 대국이 서로 다른 동아시아 구상을 꿈꾸는 구도 속에서 한국은 이들이 평화적으로 경쟁하며 협조할 수 있도록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강대국 간 신뢰 구축을 돕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 및 중·일 간 경합하는 규범과 제도들을 풀는 동시에 이들이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견국의 적극적 역할공간을 만들어가는 제도 틀을 설계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키텍처'의 시각이 필요하며 따라서 '설계/디자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제어 동아시아, 꿈, 아키텍처, 코젤렉, 전이효과, 미국, 중국, 일본

## I. 서론

1894년의 과거와 2014년 현재는 역사적 시간에 의해 연결된다. 역사적 시간은 측정 가능한 자연시간과 달리 서로 다른 경험영역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겹치고 교차하는 속에서 존재한다. 이는 과거와 미래 사이, 혹은 경험과 기대 사이에서 변화해 왔다. 코젤렉(Koselleck, 1985)에 따르면 근대에 독특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바로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이 분리되면서 후자가 더 커지게 되는 시간 구조다. 새로움이 낡음을 지속적으로 청산하면서 경험 부분은 작아지고 기대, 희망, 예측들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모으고 점점 빨라지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인간에게 더 짧은 시간 간격을 강요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시간의 밀도를

높여가며 미래를 앞당기기 시작하고 인간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부풀리는 것이다. 여기서 미래는 과거 및 현재와 질적으로 다를 것이고, 현재는 지나간 그 당시의 미래가 된다. 시간이 갖는 동질성이 파괴되고 시간 구조 속에서 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코젤렉은 근대적 시간의 가속성을 지적하면서 역사가 경험영역을 축소시키고 그 항상성을 뺏으면서 새로운 미지의 것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미지의 것이 갖는 복잡함으로 현재적인 것 역시 경험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성을 지적한다. 자기 가속성을 지닌 시간은 현재로 하여금 현재로써 경험할 기회를 빼앗고 미래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Koselleck, 1985: 39).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역사적 헤안은 과거의 반추보다는 미래를 통해, 역사적 미래구상을 상대화하는 역사적 예측으로 포착될 수밖에 없다. 과거로부터 배워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시간인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1894년 갑오년 동아시아의 꿈은 근대적 시간이란 새로운 시간 구조에 적응하면서 기대하는 미래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계몽사가이자 근대화의 지적 지도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동아시아의 꿈을 봉건적 현재의 극복을 통해 나아가야 할 진보의 종착지로 잡아 미래에 문명사적 가치를 부여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사회와 인간, 국가를 단일한 시간축에 위치시켜 문명화 단계(야만 → 반개 → 개화)의 도달점의 차이로 배열함으로써 진보의 미래를 구축하고 국가의 독립과 연결시켰다. 국가의 독립을 목표로 문명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종 연대에 의한 동양 평화를 그린 안중근의 꿈 역시 문명화를 수단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일본의 근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탈아(脫亞)’론을 비판하고 ‘입아(入亞)’를 주장했다.

120년 전 갑오년이 근대화의 일천한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의 불균형 정도에 따라 국가 간 성패가 갈리고 연대보다는 경쟁, 공생보다는 각생의 질서가 지배적인 시간이었다면, 21세기 동아시아의 꿈은 어떤 시간 구조 속에 있는 걸까. 여전히 시간의 미지성과 가속성에 영향을 받는 것인가. 현재적 경험을 완전히 벗어나는 미래를 향해 치닫는 것인가. 아니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속에 적합한 경험영역이 열림으로써 미래는 달리 포착되는 것인가. 항상적 시간의 시대로 복귀하는 걸까. 2014년 동아시아 꿈의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글은 중국의

꿈이 대안적 미래의 성격을 갖지만 전통적 과거로 회귀하는, 항상적 시간의 시대로 귀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본의 꿈은 120년 전 근대화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 한국의 대안은 21세기 환경에 부합하는 시간관념 속에서 주변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꿈을 엮어내는 능력에 의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결론짓는다.

## II. 1894년의 꿈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예(禮)를 명분으로 하여 천하를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으로 나누는 화이(華夷)개념에 근거한 전통 위계질서를 유지해 왔다. 1894년 청일전쟁은 이 질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서양 국제질서를 가져오는 결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서양 근대를 가장 앞서 수용하면서 일본은 기존 문명의 변방이란 위치를 서양 문명의 최전선으로 역전시켜 동양의 핵심으로 부상한다는 꿈을 키웠다. 그 핵심 이데올로그(idéologues)인 후쿠자와에 따르면 동양이 안고 있는 과제는 구미의 압력에 저항할 힘을 보유하는 일이나, 페르시아, 조선 그리고 아시아 최대국인 중국(淸) 모두 혼미의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동양의 열국이고, 문명의 중심이 되며, 타국의 별로서 서양 제국에 당할 자는 일본 국민뿐”이라 단언한다(福澤諭吉, 1981b). 중국과 조선이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我國(일본)은 隣國의 開明을 待하여 共히 亞細亞를 興하기를 猶豫할 수 없”으므로 문명의 서양과 보조를 맞추고, 조선과 중국을 오래된 이웃으로서 특별한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닌 문명과 야만의 관계로, 그리고 후자를 문명화시키는 관계로 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福澤諭吉, 1981c).

일본은 이러한 신문명의 꿈을 청일전쟁 개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신문명을 대표하는 소국”과 “구문명을 대표하는 대국” 간의 충돌과 의전(義戰)으로서 전쟁은 일본의 문명 선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전쟁의 승리는 일본에게 한편으로 서양 문명의 구원자로서 자부심을 가져다주었지만, 다른 한편

으로 서양에 대한 동양의 대표자/대변자 위치로서 정체성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삼국 간섭에 의해 ‘탈아’의 벽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山室信一, 2001). 사회진화론과 황화론이라는 서양의 인종주의적 접근에 대항하여 황색 인종 간 연대를 주창하는 ‘동양연대론’이 부상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대표적으로 타루이(樽井藤吉)는 동종인의 일치단결로 서양의 위협에서 벗어나자는 ‘대통합방론’을 주장한다. 구미가 동양에 개국(開國)과 문명개화를 강요하는 한편 아시아계 이민에 대해서 구미가 문호를 폐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인종과 인종의 교섭충돌, 특히 백인종과 황인종의 각축으로 전개되는 약육강식의 국제정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싸움은 상호간 판도의 확대 경쟁이 될 것인데, 구미와 평형을 이룰 만한 판도를 확보하려면 일본은 지리상의 순치(唇齒), 인종상의 동종인 동양 삼국 간의 연대/합방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노에(近衛磨唐) 역시 세상을 백인종과 황인종 간의 인종 경쟁으로 보면서 ‘인종 보호의 목계’에 의한 일청(日淸)동맹론을 중심으로 동양인 스스로 동양 문제를 결정하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일종의 동양판 먼로주의를 내걸었다.

대통합방론, 동양연대론 등 인종 연대는 당시 조선에 상당한 매력을 갖는 구상이었다. 예컨대, 독립신문은 동양 삼국이 아시아란 동일한 지리적 경역(境域)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이 같고 문자가 상통하며 풍속도 유사하기 때문에 유럽의 침범을 ‘동심(同心)’으로 막아 속국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독립신문』, 1898/4/7). 나아가 “일본 사람들은 황인종 형제의 모든 나라들을 권고하고 인도하여 종자를 서로 보호할 큰 계책을 세워 동양 큰 판에 평화함을 유지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한국인들은 이 전쟁을 황색 인종의 멸절(滅絶)이나 흥창(興昌)이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황색 인종 국가인 동양 삼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황성신문』은 러일전쟁이 러시아로부터 ‘동양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여, 러시아를 동양 삼국의 공동 적국으로 간주했다(『황성신문』, 1903/10/15; 1903/10/28; 1904/5/6; 1904/5/31).

안중근의 동양평화론도 이러한 맥락을 잇고 있다. 그는 러일전쟁을 “황백인종 간의 경쟁”이라 보았고, 이 때문에 “지난날의 원수진 심정이 하루아침에 사

라져버리고 도리어 하나의 큰 인종 사랑하는 무리(一大愛族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같은 인종인 이웃나라를 깎고 우의를 끊어 스스로 방홀(蚌鷸)의 형세(방합과 도요새가 서로 다투는 틈을 타서 둘 다 어부에게 잡히고 만다는 고사)를 만들어 … 한청(韓淸) 양국인의 소망을 크게 절단”내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하는 ‘의전(義戰)’을 개전하였다고 주장했다. 1910년 2월 17일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인 ‘청취서’에서 그는 “한국, 청국 그리고 일본은 세계에서 형제의 나라와 같으니 서로 남보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 형제 간의 사이가 나쁠 뿐이며 서로 돕는 모습보다는 불화만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지역협력질서 구상으로서 ‘동양평화론’을 주장했다(정용화, 2006).

안중근의 꿈, 인종에 의한 동아시아 연대의 꿈은 서양에 대한 안보적 대항을 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한 가운데 동아시아가 제국주의 세력권 경쟁에 함몰되고 일본이 탈아를 통해 영국과 협력으로 동북아(극동) 질서의 주도자가 되고자 매진하면서 소멸되었다. 청일전쟁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북아에서 영국 패권 질서 건축의 2인자로서 제국주의 국제정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이끌었다.

동양연대의 꿈이 좌절된 또 다른 이유는 청일전쟁이 가져온 경제 변화다. 구미 자본주의, 혹은 런던의 세계금융 자본시장에 편입되는 결과가 그것이다.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은화 2억 3천만 냥의 배상금이 주요한 계기였다. 이 배상금은 일본의 전비(戰費)를 완전히 탕감하는 규모로서, 중국 정부 예산의 3배, 일본의 연간 재정 수입의 8배, 일본 국민소득의 1/4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청일 양국은 배상금을 영국은행(Bank of England)에 예치하기로 합의했고, 일본은 이를 일본은행의 금화준비고(gold reserve)로 전환시켜 일본 엔화의 금태환(金兌換)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적 성장 궤도에 오른 일본은 대외관계의 확대에 따라 안정적 통화시스템으로서 금본위제(金本位制)를 고려해야 했다. 금본위제 도입은 국제 거래에서 외환리스크를 줄여주는 촉진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등국가, 유럽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금본위제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금 보유가 턱없이 부족한 데 있었으나 청일전쟁 승리로 일본은

배상금을 영국 통화, 즉 금으로 태환하는 화폐로 지불받기로 하여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과거 일본 정부의 구좌 개설을 거절했던 영국은행은 막대한 배상금을 마다할 리 없었다. 따라서 일본이 영국과 여타 유럽 금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인 런던 금융가에서 일본은 국채를 발행해 군사력 증강을 위한 전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런던의 은행가들은 동맹국 일본 정부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협조를 얻어 러일전쟁 전비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 이는 러일전쟁 개전 초기 일본으로부터 금 유출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또한 일본이 전쟁 중 런던, 뉴욕, 베를린에서 거액의 전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Metzler, 2006: 47). 그 규모는 8억 엔(8200만 파운드)으로 당시 정부 예산의 2배에 달했고, 일본 국내 모든 은행의 예금고를 초월하는 수치였다.

한편, 중국은 배상금을 갚기 위해 유럽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려 이권 세일에 나섰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열강은 개발 이권, 조차권(concessions)을 쫓아 몰려들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외채를 제공했고, 그 결과 중국은 종전 3년 만인 1898년 1600만 파운드 규모의 영국-독일 용자로 배상금을 최종 상환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청일전쟁 전비는 전적으로 유럽 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셈이고 중국은 배상금 지불을 위해 유럽 자본에 철저히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본주의 이외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본위제, 런던 중심 자본시장, 자유무역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존과 번영의 꿈을 키워야만 했다. 선두에 나선 일본도 청일전쟁을 계기로 신일영(新日英)통상조약에 의해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며 관세자주권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고 독일(프러시아)에서 배운 산업정책에 의한 따라잡기를 시도했지만, 영국의 패권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가능한 상대적 자율성에 불과했다. 결국 후쿠자와의 꿈은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의 독립을 지켜주는 대신 2등 국가 일본의 위치를 확보하는 현실로 귀결되고 말았다.

### III. 21세기 동아시아: 꿈의 경쟁

120년 전 19세기 말 동아시아가 권력이동에 따른 거대한 변환을 겪었듯이 21세기 초 동아시아 지역질서도 거대한 변환을 겪어 왔다. 미중 간 권력이동에 따라 미국 중심의 안보질서가 도전을 받고, 지구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의 다자주의적 제도화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한편, 근대 이행과정에서 야기된 정체성 갈등이 부각되면서 전통적 외교관계가 동요하고 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는 지역질서의 재건축 시대로 접어들었고 새로운 동아시아의 꿈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접국들에 대한 영향력이 신장됨에 따라 ‘태평양을 가로막을 것’이란 전략적 우려, 자국 경제 회생을 위해 세계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 진입의 필요성이란 경제적 고려가 결합되면서 지역질서 건축에 적극 나서게 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 의해 제시된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양자 동맹의 강화, 중국 등 신흥국과의 파트너십 심화, 지역다자제도에 적극적 개입, 무역과 투자의 확대, 군사적 전진배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이란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안보, 경제, 가치 등 3면에서 전진배치외교(forward-deployed diplomacy)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동맹을 토대로 한 안보질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란 기성 질서에 새로운 층위를 보강한 것이다(Clinton, 2011).

미국은 나아가 ‘태평양의 꿈(Pacific Dream)’을 펼치고 있다. 2013년 4월 15일 케리(Kerry) 국무장관은 일본 방문에서 널리 익숙한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의 연장선상에서 태평양 저편의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성장해 가자는 비전으로서 보편가치를 통해 안보, 경제, 환경, 사회협력의 신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아시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서 첫째, 동맹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강력한 안보적 성장을 이룩하고, 둘째,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을 갖는 공정한 시장체제의 성장을 기하며,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수립하고, 넷째, 민주주의, 법치, 보편적 인권 등에 기반한 정당한 성장을 추구하는 등 네 가지 성장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Kerry, 2013).

중국은 미국의 아키텍처 구상을 대중봉쇄정책으로 인식하고 대안적 아키텍처를 제시하게 된다. 2012년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은 “조화”란 가치를 띠우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정신을 견지하여 조화세계”를 구축하자고 제창했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발전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균형,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균형, 효율성과 평등성의 균형을 통해 인간 중심의 포괄적 발전”을 주창하면서 시장중심의 워싱턴 콘센서스(consensus)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몽”이란 수사와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며 군사력 강화와 함께 역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지렛대로 삼아 지역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

미국이 재균형 정책의 주축으로 경제 면에서 APEC, 안보 면에서 EAS(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개입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오는 데 대해 중화질서의 부활을 성취하기 위한 아시아 외교 지침으로 ‘친(親)·성(誠)·혜(惠)·용(容)’, 즉 ‘친하게, 성심껏, 호혜 원칙에 따라, 넓게 포용한다’는 키워드를 제시하여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하고, 주변 나라들이 중국의 발전 혜택을 넓게 받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신형주변국관계”를 제시했다(Xi, 2013).

이제 중국은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정하는 규범과 이를 구현하는 제도를 독자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냉전의 유물인 동맹체제에 의해 지탱해 왔음을 비판하면서 공동, 포괄,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를 주요 개념으로 하는 ‘신안보관’이란 규범을 제시하고, 미국이 배제된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를 지역안보 다자기구로 제안하고 있다. 경제 면에서도 중국은 경쟁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미국식 세계화를 비판하면서 지속가능성과 평등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포괄적 발전 규범을 제시해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금융·개발부문에서 새로운 규범을 담은 대안적 제도로 제시되었다. 통상 부문에서도 고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지향하는 미국 주도에 대항하여 새로운 규범을 담은 지역다자 FTA 모델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 명시적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재정 압박으로 군사비를 감축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기존 동맹국들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반접근, 지역

거부전략이라 부르며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중국 역시 서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해·공군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군사적 갈등을 회피하면서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상호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이 강대국에 걸맞은 외교를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책임 있는 패권경쟁국으로서 위상을 설정한 반면 미국은 향후 경제력 회복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시간 벌기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국가는 지역질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되 적나라한 패권 경쟁으로 치닫진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있다(전재성, 2013).

미중 양강 간 경쟁 구도 속에서 1894년 동아시아의 꿈을 주도했던 일본은 21세기 들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주창하고 나선 바 있다. 2009년 집권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우애(fraternity)”를 키워드로 해서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을 주장했다. 그는 물질만능, 개체주의적 미국식 시장자본주의와 지구화(globalization)를 극복하고 외교적으로는 미국중심주의로부터 전환하려는 지역주의를 전면적으로 내걸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동맹과 공동체의 양립과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퇴진했다. 이후 “강한 일본”을 외치며 부흥을 내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등장하면서 지역주의는 퇴조하고 “국제 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하에 군사적 능력 및 역할 확대, 미일동맹 강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은 미국의 안보 아키텍처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미일동맹의 반중(反中)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미일 vs. 중국’의 구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나아가 호주, 인도 등 보편 가치 공유국들과 연대하고 또한 러시아, 북한과 관계 개선 등 독자적 외교 노선으로 중국 포위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선언 역시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손열, 2014b). 이러한 반중적 흐름 때문에 일본의 국가전략에서 적극적 지역다자질서 구상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렇듯 미국, 중국, 일본이란 세 대국이 지향하는 미래는 서로 다르다. 과연 동아시아 미래의 역사는 어느 쪽이 답을 수 있을까.

#### IV. 동아시아의 꿈, 한국의 역할

현재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근대 지역질서의 전형인 서구처럼 힘의 각축과 세력균형 논리가 작동하는 안보 영역과 시장 규율에 의한 초국가적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 영역으로 구성되어 존재해 왔던 반면, 여러 면에서 서구와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는 2000여 년의 전통 위계질서로부터 근대 국제 질서로의 변환을 급속하고 압축적으로 겪어 충분한 조정과 여과의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전통질서가 역내 구성원들의 의식과 감정의 차원에 존속하고 있음은 물론, 전통질서의 요소들이 미래질서의 대안적 원형으로 복원되는 경향도 보인다. 동시에 19세기 말 이래의 제국주의가 여전히 기억의 정치 영역에서 남아 동아시아 국가들의 양자관계에 족쇄가 되고 있음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주변국들에게 20세기 제국주의 식민지 역사를 상기시켜 안보 위협이 되는 경향을 목도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안보 영역에서 근대 세력균형의 논리와 경제 영역에서 탈근대 거버넌스적 논리가 작동하는 동시에 정체성의 영역에서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의 유산이 안보 및 경제 논리와 함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의 꿈은 21세기 동아시아의 경험공간을 반영하면서 기대 지평을 넓히는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은 보편가치를 띄우면서 세련된 언어로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여러 결함을 노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노정된다. 동맹의 부채살 구조로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중국의 비중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미국 주도 경제 질서로는 지역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데 한계가 있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현재주의(presentism)적 미래관으로 동아시아의 꿈을 채우기는 부족하다.

21세기 중국의 꿈은 예기치 못한 미래라기보다는 경험의 부분이 크게 들어오는, 따라서 과거를 미래로 끌어들이는 진단이 내재되어 있다. 과거가 지니는 이미 보장된 미래성이 국가의 행동반경을 여는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미래를 전근대 혹은 전통의 시간 구조로 진단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지구화와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전통적, 전근대적 시간 구조로 회귀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꿈은 과거의 영광을 부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강하게 깔린 프로젝트라 하겠다.

미국과 중국의 꿈은 서로 자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두 꿈은 서로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있으며 패권적 일면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렇게 가면 동아시아의 미래는 어둡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는 제3의 꿈이 필요하다. 문제는 일본이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고, 지난 120년간 동아시아 담론을 주도한 경험을 가진 국가다. 근대 진입 이래 가장 오랫동안 풍부한 지역 연대의 꿈을 제시해왔으나 식민지 과거와 전쟁 등 역사와의 화해에 따른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저하고 좌절해 왔다. 현재 일본 수뇌부는 오늘의 어려움이 1945년 패전 이후 들어선 전후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야기되었다고 믿고 있다. 승자에 의한 점령 사관으로 일본의 아름답고 영광스런 과거가 부인되었고, 점령군의 손으로 쓰인 평화헌법 때문에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는 비정상 근대국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이 재도약하려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애국주의 교육과 함께 헌법 개정으로 군대를 보유하는 정상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수구적 대응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반중 연대를 꺾이는 외교전략 역시 21세기 중국 경제의 확장성과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 강화의 추세를 볼 때 지극히 1894년적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1930년대 중일전쟁 전후 일본의 지배 엘리트들은 중국을 품지 못하는 동아공동체는 성립될 수 없음을, 나아가 일본의 활로를 개척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백영서, 1997). 21세기의 동아시아 역시 중일 간 협력 없이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이렇듯 미국, 중국, 일본이란 세 대국이 서로 다른 꿈을 갖고 있는 속에서 한국은 이들이 평화적으로 경쟁하며 협조할 수 있도록 돕는 중견국의 꿈을 키워야 한다. 한국은 어느 한편에 기대어 이득을 보려는 약소국 외교로는 더 이상 커진 덩치에 비례해 다변화된 국익을 성취할 수 없다. 중견국으로서 강대국 간 신뢰 구축을 돕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21세기로 진입하기 이전 한국 외교는 동아시아 지역(region)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지역전략 없이도 한미동맹,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 전략협력관계의 확보로 국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역내 국가들과 다자연대를 추구하려는 시도는 냉전기 이승만의 태평양동맹구상과 박정희의 아시아태평양각료이사회(ASPAC) 주창 등이 있었고 냉전 이후에도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노력, 김대중 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 등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한 외교 구상을 본격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의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3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설정할 만큼 동북아의 꿈을 갖고 있었다. 동북아를 단위로 한 경제협력 강화와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번영의 공동체”를 실현하고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며, 그 핵심과제로서 “진정한 동북아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의 꿈은 ① 구상의 적실성과 실천 능력, ② 인정(recognition)의 문제란 두 차원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하여 결국 좌초했다. 첫째, 지역 구상은 자기 중심적인 발상에 근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로 말미암아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북아중심국가론을 펼쳤으나 막상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란 보다 넓은 지리적 공간을 협력의 단위로 삼아 움직였고 한국을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997~1998년 동아시아를 휩쓸고 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남아의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삼국은 아세안+3(APT)란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여 다양한 금융, 무역협력을 추진했고, 새로운 지역질서의 그림을 ‘동아시아공동체’로 명명하면서 그 실천전략의 마련에 나섰다.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창한 동북아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동북아 구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속에서 설정되지 못했다. 전술했듯이 동아시아 질서는 경제적, 사회적 차

원에서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가 확장, 심화되어 탈근대적 양태를 띠는 한편, 국가 간 세력배분 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력 경쟁이란 근대적 경쟁 구도가 자리하고 있고, 근대이행기에 야기되어 미해결 상태인 역사, 영토 문제가 엄존하여 국가 간 대립 구도를 연출하는 세 가지 층위가 병존하면서 상호 연계되어 존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동아시아의 경제/안보/역사 넥서스란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기능주의에 근거하여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로의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를 기대하는 나이브(naive)한 접근을 추구했던 것이다.

둘째, 동북아 구상은 한미동맹, 한일 관계 등 양자 관계와 정합적으로 설정, 운용되지 못했다. 두 전통적 우방과 외교적 긴장을 초래한 속에서 다자주의와 양자주의가 상호보완적이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미국의 불신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족 우선적 대북관계나 ‘동북아 균형자론’, ‘협력적 자주’ 등은 미국과 잦은 마찰을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는 동맹보다 지역공동체를 우선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미국은 한국의 지역적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의 ‘중심’과 ‘균형자’ 역할에 대해 대동소이한 반응이었다. 이런 만큼 국내적으로도 이념적 대립 구도가 심화되었고 많은 논란을 초래했다.

뒤이어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 구상을 폐기처분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코리아’란 슬로건 아래 지구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외교노선을 선택했다. 그 결과 한미관계는 최상의 상태를 이룩했고 녹색성장(green growth) 주도, G20 정상회의 및 부산 원조효과성 고위자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의 성공적 개최로 지구 거버넌스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동북아 구상 폐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아시아 구상’이란 정책을 내놓았으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실행 수단도 여의치 않고 주변국의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멸의 운명을 맞이했다.

## V.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가능성<sup>1</sup>

미중일 지역 구상이 경합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전략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였다. 이 구상은 지역 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이 미치지 못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아시아 패러독스’로 부르면서 경제(혹은 비정치안보)와 정치안보의 이분법 발상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 연성안보 이슈(재난 구호, 사이버 안보, 에너지, 기후변화 등)에서 참여가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해 역내 평화와 협력 메커니즘 구축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신뢰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신뢰 외교의 한반도 버전이라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신뢰 외교를 동북아에 적용하여 신뢰가 부족한 이 지역에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다. 신뢰를 통해 협력의 관행을 쌓아가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구상은 장기적 시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존 역내 다자협력체를 대체하는 과감한 접근을 지양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선순환적 발전을 모색하는 일부분으로서 설정하고 있으며, 또 주변국의 이해를 얻으려는 조심스런 시도로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지역구상으로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미흡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는 이 구상의 출발점으로서 ‘아시아 패러독스’론이 안고 있는 개념적 적실성을 들 수 있다. 사실 경제적 상호의존/협력과 안보 갈등의 공존은 아시아만의 패러독스가 아니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및 양대전 간기 영국과 독일,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표적이고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사이 역시 양자 공존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 기능적 협력이 안보 갈등을 완화, 해소한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이는 역설이

<sup>1</sup> 이하의 논의는 손열(2014a).

나 경제와 군사가 별개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결코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아시아의 사례는 자유주의적 역설이라 부를 수 있다.

보다 큰 이론적 이슈는 역설의 해결방식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비안보영역(특히 비전통 연성안보 이슈)에서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면 경성안보 이슈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다. 현 정부는 협력 관행 축적 방식으로 의제별 국가 정부 대표회의 개최, 기존 협의체의 활성화 및 참여국 확대를 통한 대화 촉진을 들고 있으나 이런 활동들이 심화될 때 경성안보 이슈에서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정적 논리,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연성’에서 ‘경성’으로 협력전이 논리는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대표적 접근법으로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핵심 개념인 이른바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로 설명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구상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안보 영역에서 기능적 협력에 따른 전이효과가 발생하여 안보협력을 이끈다는 논리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경우도 이론적으로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에서 신뢰와 협력의 관행을 쌓아간다면 전이효과로 안보 의제에서도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론적 포인트는 전이효과와 전이의 메커니즘이다.

신기능주의에 따르면 비안보 영역에서 기능적 협력의 확산에 의해 자국 내 평화이익(peace interest)이란 사회적 선호가 형성되고 상대국의 유사한 사회적 선호와 연계되면서 양국의 안보적 결정에 구속(constraint)을 가하게 된다. 여기서 전이효과는 기능적 상호의존성, 즉 서로 다른 부문(이슈 영역) 간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높을 때 일어나게 된다. 한 분야에서 통합이 상호 연관된 여타 분야에 기능적 압력(functional pressure)을 가하여 통합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비안보 부문 간 상호의존성이 낮은 경우, 또한 비안보 영역과 안보 영역이 거의 독립적인 경우에는(즉, 비안보 부문의 안보화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의미 있는 기능적 압력이나 전이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주요 이슈 영역으로 잡고 있는 비전통 안보 부문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야 하고 나아가 이들과 안보 영역 간 상호의존성이 유의미하게 존재해야 전이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론적 쟁점은 상호작용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관련 행위자들의 사회화(socialization)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Lindberg, 1963). 주요 행위자들 간에

지역적 해법에 의존하는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으로서, 상호협력의 관행이 쌓여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으로 습관화되어 결국 안보 면에서의 협력도 가능하게 된다는 일종의 정치적 전이효과(political spillover)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형성된 습관은 정체성을 구성하여 안보 영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문에서 혹은 중요한 특정 부문에서 협력의 관행이 진전되어야 하며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이론에 기초하여 동북아 평화협력을 구상한다면 협력의 범위와 심도가 비전통 연성안보란 신흥 영역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파급효과가 큰, 혹은 전통안보 영역과 상호의존성이 큰 부문이 선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근본적 쟁점은 신기능주의의 대표학자인 하스(Haas)가 술회하였듯이 이 이론이 서유럽의 다원적 산업사회를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비서구 사례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주권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공식, 비공식 정부 네트워크, 시민사회 및 전문가 네트워크, 초국적 이익집단 네트워크 등 다양하고 다층적인 네트워크와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중심성이 강하고 민족주의가 건재한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동아시아 문제는 경제협력의 진전이 안보 영역으로 쉽게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본래 경제협력은 그 협력이 고도화될수록 안보적 외부 효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은 이득 배분의 비대칭을 가져와 상대적 교섭력의 격차, 나아가 국력 격차를 초래한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간 전략적, 안보적 경쟁이 엄존하고 있어 주요국들은 자국에 부정적인 안보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경제협력에는 주저하고 있다. 이른바 경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포괄적 지역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 질서와 안보 질서가 분리된 가운데 양 영역 간 전이효과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 제도화의 가장 큰 과제는 안보화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제어하고 긍정적 전이효과를 창출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협력의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경제 부문 중 안보 이슈와 상호의존/연관 효과가 큰 부문을 선정하여 이를 풀어나가면서 전

이효과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역과 금융 부문은 대외 의존형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번영의 사활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안보적 연관 효과가 비교적 큰 부문이다. 경제주의적 접근으로 호혜적 결과를 강조하면서 이 영역에서 작동하는 안보화의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여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룰 경우 경제적 번영과 함께 안보 조건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한국은 기존 다자/소다자 협력체인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한중일정상회의 등 세 협력체를 중심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이해관계의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중견국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강대국 간 구상 혹은 질서건축 경쟁이 대립적으로 전개되어 양자택일적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역질서를 디자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이란 세 대국이 서로 다른 동아시아 구상을 꿈꾸는 속에서 한국은 이들이 평화적으로 경쟁하며 협조할 수 있도록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강대국 간 신뢰구축을 돕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 및 중일 간 경합하는 규범과 제도들을 품는 동시에 이들이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견국의 적극적 역할공간을 만들어 가는 제도 틀을 설계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키텍처’의 시각이 필요하며 따라서 ‘설계/디자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중견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 경합할 만큼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뜻을 함께 하는 행위자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 간 이해관계를 중개하며 제도 설계를 이루어내는 네트워크 능력이 필수적이다. 현재를 유지하려는 미국, 대안적 미래를 꿈꾸는 중국, 과거로 회귀하는 일본, 북핵의 악몽 사이에서 중견국의 꿈이 동아시아의 영몽(靈夢)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백영서 · 최원식. 1997.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 손열. 2014a. “공생과 번영의 동아시아 다자질서 건축전략”(EAI 미간행 논문).
- \_\_\_\_\_. 2014b. “일본의 TPP 교섭참가결정 분석: 지역경제질서 건축전략의 맥락에서.” 『일본연구논총』 39호, 235-254.
- 장인성. 2003. “근대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인종.” 『근대 국제질서와 한반도』. 서울: 을유문화사.
- 전재성. 2013.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 『외교』 107호, 5-14.
- 정용화. 2006. “근대한국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지역질서 구상.” 『국제정치논총』 46권 1호, 55-77.
- 『독립신문』. 1898. 4. 7.
- 『황성신문』. 1903. 10. 15; 1903. 10. 28; 1904. 5. 6; 1904. 5. 31.
- 福澤諭吉. 1981a. “文明論之概略.” 『福澤諭吉選集 4卷』. 東京: 岩波書店.
- \_\_\_\_\_. 1981b. “時事小言.” 『福澤諭吉選集 5卷』. 東京: 岩波書店.
- \_\_\_\_\_. 1981c. “脫亞論.” 『福澤諭吉選集 7卷』. 東京: 岩波書店.
- 山室信一. 2001.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 Clinton, Hilary.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 Kerry, John. 2013. “Remarks on a 21st Century Pacific Partnership” (April 15, 2014).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3/04/207487.htm>
- Koselleck, Reinhart. 1985. *Futures Past-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Cambridge: The MIT Press.
- Lindberg, L. N. 1963. *The Political Dynamic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etzler, Mark. 2006. *Lever of Empire: The International Gold Standard and the Crisis of Liberalism in Prewar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ajita, Tetsuo and Harrotunian, Harry. 1988. “Japanese Revolt against the West.” In Duu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Xi, Jinping. 2013. “China to Further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3-10/26/c\\_125601680.htm](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3-10/26/c_125601680.htm) (검색일: 2014. 10. 11).

---

**Abstract**

## An East Asian Dream? 1894 and 2014 in Power Transition

Yul Sohn *Yonsei University*

---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a vision for East Asia by comparing the historical times of 1894 and 2014. While China Dream as an alternative future returns to a traditional past, Japan Dream does not move beyond the modernization that Japan successfully pursued more than 100 years ago. Korea's alternative vision can be derived from blending existing dreams and ensuring consent from the three major powers. Korea needs to play a role of a middle power by facilitating mutual trust of major state powers and by brokering and coordinating their interests. In doing so, this role will require an architectural view and designing diplomatic capabilities.

**Keywords |** East Asia dream, architecture, Koselleck, spillover effect, USA, China, Japan